

신당-민주 통합 협상 왜 결렬됐나

‘밥그릇 싸움’ 대선은 없었다

양당 후유증 클 듯...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

결국 지분 싸움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당 대 통합 협상이 무산됐다는 단상이 범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합민주당 오충일 대표가 21일 제의한 재협상 제의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사실 통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도 양당 관계자들은 통합을 극적으로 이룰 것이라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통합 재협상 거부로 일단 대선후보 등록(25, 26일) 전 양당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당이 합당의 정치적·법률적 효과를 기대하려던 22, 23 양일간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 뒤 늦어도 후보등록 전날인 24일에는 합당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1일을 넘기면 물리적으로 통합이 어렵

기 때문이다.

정당법상 후보등록 개시일 이후 합당신고서가 접수되면 대통령 선거(12월 19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투표용지와 홍보물 등에 ‘통합민주당’ 등 통합된 새 정당의 명칭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합 협상 파국은 지분 싸움에서 비롯됐다. 대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지난 12일 당내 역할 관계를 무시하고 민주당과의 ‘5대5’ 지분 구성안을 받아들였을 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현재 당 세력을 고려한다면 ‘10대1’ 정도,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7대3’은 쏠려야 한다는 것이 정지권의 일반적 분석이었다.

‘5대5’ 지분안에 대해 정당이라고 보다는 정치연합 성격이 강한 대통합민주당 안에서 과열음이 흘러나왔다. 정 후보가 지분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

다는 당 지도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으로 지분 협상까지 했다는 비판이 당내를 휩쓸었다.

이처럼 통합 협상이 절망에 빠졌음에도 아직도 통합의 가능성을 잡치는 목소리는 남아있다. 21일 밤 물밑 협상을 통해 22일 극적인 통합 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후보단일화 작업과 선관위에 통합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시간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장은 통합 논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더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합의 여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적어도 후보 단일화만이라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당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다자구도로 각개 약진한 후 결정적 순간에 선거연합 형태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맞잡은 손?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간 합당과 후보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단일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21일 오후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불교계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광주 남구 선대위 전체회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광주 남구지역 선거대책위(위원장·지병문 의원)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선 승리를 다짐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임현모·박경민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 홍춘기·이창호 남구선대위 부위원장, 이명자 광주시의원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출마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BBK 추가조작, 두 자녀의 위장취업, 특혜 등 수많은 의혹과 관련된 이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특별분부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거나 총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박한철 본부장은 인천지검 2차장인 김 차장검사를 본부로 데려와 대외창구 역할을 맡겼다.

김 차장은 “수사팀 검사는 수사능력과 자질, 청렴도 등이 중요한 인선 기준”이라며 “본부의 구성은 검사 10여명을 포함해 30~4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내주 수사 착수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막바지 인선 작업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다음주 수사 착수를 앞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수남(48·사시 26회) 특별본부 차장검사는 21일 “이번주 중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 10여명 등에 대한 막바지 인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朴 “선거전 시작되면 역할”

당 창립 10주년 기념식 불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명박 후보측을 비롯한 지도부의 잇단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는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이전부터 잡혀있던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이전부터 잡혀있던 다른 일이 있어서 10주년 행사에 불참한 것”이라며 “박 전 대표는 이전부터 이명박 후보와 회동을 비롯해 외부 일정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이었고,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박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 행사 뿐 아니라 전국에서 잇달아 열렸던 필승결의대회도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럼에도 최대한 활동을 자제한다는 측면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박 전 대표는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억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원으로서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 선거운동을 돌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박 전 대표는 22~23일 이틀간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공식 활동을 자제한다.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때까지는 측근 의원들과 회동도 일절 갖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최근 향후 본인의 행보와 관련해 “법정 선거전이 시작되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측근 의원들과 회동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측근은 “박 전 대표는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5일부터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 경선에 승복한 입장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그간 꾸준히 밝혀온 바대로 활동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昌 “朴후보 났으면 출마 안했을 것”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1일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로) 났으면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런 만큼 그 상황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박 전 대표가 후보로 났으면 출마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지독한 경선은 처음 봤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죽지 않으면서, 경선 과정에서 박 후보측이 그토록 해야 할 만큼 심정에 빠졌구나를 제가 느끼게 됐다”면서 “진정으로 좋은 후보끼리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그런 지독한 경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말 정직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지도자

가 필요하다”면서 “거짓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힘을 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지지도를 보면 걱정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을 보면 BBK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를 읽는 정권교체가 되겠느냐고 (국민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같은 상황으로 정권교체가 될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설령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온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인가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많은 욕을 먹고 폭풍우 같은 비판을 받았지만 대의를 위해 저 자신을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두 후보가 당당히 선의의 경쟁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인가를 설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선의의 경쟁을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원 복구 3선거구 신당 후보에 전우근씨

대통합민주신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2·19 광주시의원 복구 제3선거구 재선거 후보에 전우근 한국인간교육연구원 이사를 공천했다.

이에 대해 공천에서 탈락한 송태종 전 광주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심사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 후보가 갑자기 바뀌었다”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과 함께 항의 방문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대선판에 가린 BBK 피해자들



장필수
경제부 차장

나라가 온통 BBK 사건으로 들쭉이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의 연루의혹 탓에 BBK 전 대표인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조명받고 있다.

21일에는 김경준씨의 부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며 이 후보와 김경

준사이의 이면계약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양측의 주장이 어땠던 간에 BBK 사건의 명백한 진실은 김경준씨가 자신이 설립한 투자운용회사인 BBK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한 후 회사 이름을 읍서널벤처스코리아로 변경한후 추가조작으로 384억원의 회사돈을 횡령,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BBK를 통한 추가조작 사건이란 얘기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BBK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 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면 BBK 추가조작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판에 BBK 사건의 진실이 가려진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김씨가 인수한 뉴비전벤처캐피탈은 광주은행의 자회사인 광은창투가 전신이다. 지역 상장사였던 만큼 김씨의 추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광주·전남지역 주식 투자자가 많다.

김씨의 추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의 모임인 ‘김경준 추가조작 피해자 대책위’ 송동식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 같은 돈을 모아 읍서널벤처스코리아에 투자했다가 추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5천252명이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투자자가 얼마만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지역 상장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타 지역 투자자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힘들다. 다만 2001년 3월 김씨가 인수할 당시 7천원 안팎이던 주가가 김씨의 추가조작과 횡령으로 1년 5개월만에 상장폐지될 때 300원이었다는 것으로 피해액을 추정할 뿐이다.

이 때문에 김씨의 추가조작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개미들에게 BBK 사건은 정치적 문제로 앞서 경제적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대책위도 “정치권은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가 빼돌린 돈이 누구 명의로 어느 은행에서 세탁돼 보관되고 있는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6년동안 눈물을 흘렸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BBK 추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bungy@kwangju.co.kr

콘택 골드

초기감기는 시간과의 싸움

감기는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걸렸구나 생각되면 콘택골드! 감기는 초기에, 늦기전에 콘택골드입니다.

초기 감기약 - 콘택골드

독한맛 3배 더 시원함 080-020-1188(신사·유곡부담) 광주 061-032-5400 대구 053-072-0505 서울 02-627-0833 부산 051-062-4270